

시청자 권익보호 동향 리포트 VOL.06

시청자권익정보센터



01

장애인과 콘텐츠

미디어 속 다양성의 실천

- 「장애는 결코 장벽이 될 수 없다」

01. 청각장애인 앵커로서 '정보 전달'과
'사회적 소통'의 책임을 안고

- 노희지 KBS 제8기 장애인 앵커

「장애는 결코 장벽이 될 수 없다

- 청각장애인 앵커로서 '정보 전달'과 '사회적 소통'의 책임을 안고」



노희지(KBS 제8기 장애인 앵커)

「장애는 결코 장벽이 될 수 없다 - 청각장애인 앵커로서 '정보 전달'과 '사회적 소통'의 책임을 안고」

뉴스를 전하는 사람, 사람들은 '앵커'라는 단어에서 흔히 또렷한 발음과 단정한 이미지,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력을 떠올린다. 그런데 청각장애를 가진 내가, 바로 그 '뉴스 전달자'가 되었다.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다. 사실, 나조차도 처음부터 이 자리를 쉽게 꿈꾸지는 못했다. 어릴 때부터 발표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내가 카메라 앞에서 뉴스를 전한다는 상상은 감히 해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도전했다. 그리고 KBS 뉴스12 생활뉴스 코너의 앵커가 되었다. 이 글은 내가 어떻게 뉴스 전달자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미디어 속에서 장애를 중심으로 소비되는 시선이 아닌 '전달자'가 되는 일의 의미를 나누고자 한다. 또한 나의 경험을 통해 미디어가 품어야 할 다양성과 가능성을 돌아보고자 한다.

장애를 숨기며 살아왔던 시절

나는 선천적 청각장애인이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크고 작은 오해들이 잦았고,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해 어색한 상황도 많았다. 발표를 좋아했지만, 상대방의 반응을 잘 듣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해 웃음거리가 됐었던 기억이 수없이 많다. 이런 경험은 점차 나를 위축시켰고,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애쓰는 사람이 되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선입견이 앞설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또렷하게 말하고, 더 밝게 웃으며 완벽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 평범하게 보이기 위해 늘 긴장했고, 작은 실수에도 쉽게 자책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초등학교 때 잠깐 꿔었던 작은 꿈이 있었다. 언젠간 내 목소리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그 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선명해졌고, 결국 나를 움직이게 했다. 내가 살아온 방식과 세상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었다.

내 안의 벽을 깨는 첫걸음

수많은 고민과 방황 끝에 나는 장애인 앵커 공채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도전의 시작은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특히 발성과 발음 훈련은 매 순간이 벽처럼 느껴졌다. 내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생방송이라는 특성상 작은 실수도 치명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컸다.

아나운서 학원에 다니며 발음을 정확히 하기 위해 휴대폰 녹음기와 거울, 젓가락을 활용해 반복 훈련했고, 어미 처리, 억양, 표정까지 세세하게 교정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주변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묻기도 했지만, 나는 그 과정이 내 안의 주체성을 단련하는 시간이라 여겼다.

훈련은 고되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웠다. 화면에 비친 나의 모습, 표정과 시선이 전달하는 인상 등 모든 부분을 반복해서 점검했다. 장애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과거를 지나, 있는 그대로의 나로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었다.

첫 생방송, 변화의 시작

2025년 5월 7일, 나는 KBS 뉴스12의 생활뉴스 코너의 앵커로 첫 생방송에 나섰다.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 앞에서 온몸이 떨렸다. NG가 허용되지 않는 생방송은 리허설과는 완전히 달랐고,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첫 방송을 마친 뒤, 내가 잘 해냈는지조차 확신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이 끝나고 받은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차분한 진행과 화면 너머로 전달된 진심이 느껴졌다는 의견은, 내가 스스로 정했던 한계를 되돌아보게 했다.

특히 한 청소년 시청자는 "보청기를 끼는 게 부끄러웠었는데 이제부터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이 도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긴장은 여전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실수도 있었지만 복기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호흡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나는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쌓아갈 수 있었다.

미디어가 품어야 할 다양성

내가 앵커가 된 이후 언론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키워드는 '최초'였다. "국내 최초 청각장애인 앵커", 물론 의미 있는 표현이지만 장애 자체보다는 장애로 인해 마주한 현실과 이를 이겨낸 노력, 그리고 현재의

역할에 대한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가 있었기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고, 도전과 성취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다름은 부족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 다름은 사회의 가능성과 깊이를 확장하는 힘이다. 전달의 가치는 내용과 진정성, 그리고 이를 믿고 맡긴 시스템의 신뢰로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앵커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미디어 안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장애인 크리에이터들과 아티스트들 덕분이었다.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장애인 크리에이터들, 연기를 통해 감동을 전하는 다운증후군 '정은혜' 배우, 그리고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빅오션'과 같은 이들의 모습은 내게 말없이 큰 용기를 건넸다. 그들은 미디어 안에서 '가능성의 존재'로 서 있었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줬었다.

미디어는 그렇게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선을 바꾸는 힘이 있다. 다양한 장애인의 존재가 미디어에 더 많이 등장할수록 사회는 점차 '다름'을 낫설지 않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포용력은 교육이나 제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익숙함이 쌓여야 비로소 자연스러움이 된다. 그 익숙함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디어의 반복적인 노출'이다.

하지만 오늘날 미디어는 여전히 주류의 시선에 따라 장애인을 왜곡된 방식으로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 1992년 콜린 반스(Colin Barnes) 교수는 드라마 속 장애인의 재현을 '불쌍한 사람', '우스꽝스러운 사람' 등 열 가지 이미지로 정형화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드라마에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천재성과 순수함으로만 묘사하거나, 현실의 어려움을 생략한 설정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또, 장애인 배역을 비장애인 배우가 연기하는 '크리핑 업(cripping up)'은 정당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장애인 배우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전체 인구의 5.05%가 등록 장애인이지만, 이들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유튜브에서는 '사회 실험'이라는 이름 아래 장애인의 약자성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소비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이 제작한 올바른 정보 영상은 조회수와 영향력이 현저히 낮다.¹⁾

결국, 장애를 다룬다고 해서 다양성이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장애 당사자의 시선과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다. 그런 의미에서 청각장애인 앵커의 첫 발걸음은 미디어의 중심에서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보여주는 시작점이라고 믿는다.

뉴스를 진행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미디어 안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당위다. 미디어는 정보를 전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청각장애인 앵커는 누군가에게는 낫설지만,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낫셈이 익숙해질수록 사회는 포용력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한다.

1) 출처: 송대시보 <https://www.s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572>

마이크 앞에 서는 이유

뉴스를 전한다는 것은 매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정보를 책임지고 시청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일이다. 동시에, 청각장애인이 앵커로 활동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가능성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그랬듯이 어떤 이에게는 그런 모습이 위로이자 용기가 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매일 부족함을 느낀다. 더 정확하게 말하려 하고, 더 자연스럽게 소통하려 애쓴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서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지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자신의 한계를 함부로 단정 짓지 말기를 바라며 길을 열기 위해서다. 미디어는 영향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더 많은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각장애인, 더 많은 소수자들이 '소통의 주체'로서 미디어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 시청자들이 그 다름을 낯설게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장애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다름이 우리의 미디어를 더 풍요롭고 입체적으로 만든다. 미디어 속 '다름'이 더는 예외가 아닌 세상을 기대하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그 가능성의 증거가 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선다. 이 글이 또 다른 누군가의 도전을 응원하는 시작이자,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02

국내동향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 시청자미디어재단, 전국 9개 센터 도서산간 지역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실시
- 200m 이상 터널에 재난방송 설비 우선 지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새로운 미래 비전과 대국민 7대 약속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 2025년도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TV보급사업 신청
-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통합 플랫폼 참여누리 탄생

권익보호

- 전기통신 사업자 47곳, 이용자 보호 평가 대상 선정
-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 발표
- 방통위, SKT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 재난 지역(오폭산불) 피해 주민 대상 TV 수신료 면제 조치 결정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 진행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시청자미디어재단, 전국 9개 센터 도서산간 지역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실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6월 한 달 동안 전국 9개 센터를 통해 서남해 및 강원 산간 일대 도서산간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일제히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부터 제주도까지, 지리적 여건으로 미디어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도서 및 읍·면 산간 지역에서 진행된다. 교육 대상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보이스피싱 및 딥페이크 예방, 미디어 과의존 예방, 키오스크 활용법, 청소년 진로 체험 등을 포함한다.

권역별 주요 교육 프로그램

지역센터	교육 장소 및 일정	주요 내용
인천센터	백령도 (6.9~6.12)	유치원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백령초 솟폼·뮤직비디오 제작, 딥페이크·뉴스 제작 특강
대전센터	충남 보령시 원산도 (6.18~6.19)	'도담도담' 캠프, 영상 제작, 미디어 나눔버스, 딥보이스 범죄 예방 특강
광주센터	전남 신안군 하의도 (6.18~6.20)	섬마을 미디어 페스티벌, 키오스크 체험,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세종센터	충남 태안군 신진도 (6.23~6.24)	'다함께 차차차', 주민 디지털 기기 교육, 초등생 교가 뮤직비디오 제작
부산센터	제주도 중학교 (6월 중)	특수학급 대상 디지털 시민성, 미디어 활용 교육

특정 계층 및 소규모 기관 특화 운영

지역센터	대상 및 일정	특화 내용
충북센터	충북 괴산군 (6.12)	4개 유치원 연합 '거점형 유아 교육', 미디어 놀이 및 바른 사용법 교육
경남센터	통영시 옥지도 (6.23)	옥지초·중 전교생 진로 체험(라디오, 애니 더빙), 8월 청소년 캠프 예정
강원센터	화천군 산양초 (6.27)	전교생 대상 라디오 방송 체험, 방송직업 탐색
울산센터	울산·포항 읍·면 (6월 중)	6개 기관 대상 유아·청소년 AI 영상, 유튜브 제작 체험

🔗 더 알아보기 : 시청자미디어재단 > 알림마당 > 보도자료([Click](#))

200m 이상 터널에 재난방송 설비 우선 지원

2025년 4월 23일부터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개정안은 길이 200m 이상 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에 대한 방송통신 설비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수신 상태 조사를 강화한다. 이 조치는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며, 재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안전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난방송 설비 설치 비용 우선 지원 확대**

길이 200m 이상 도로 및 철도 터널에 재난방송 설비 설치 비용이 우선 지원된다. 이는 전국 터널의 약 80%에 해당한다. 비상 대피시설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재난방송 수신 상태 조사 절차 및 판단 기준 구체화**

방송 신호 세기와 품질을 측정해 재난방송 수신 상태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조사 결과는 터널 관리기관 및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방통위 누리집에 공개하여 후속 조치를 유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터널 내 사고 시 치명적일 수 있는 정보 공백을 메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필수적인 재난 정보를 적시에 얻을 권리를 보장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재난 예방 정보가 원활히 제공되고 재난 시에는 그에 대한 상황과 대피 요령 등이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수신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더 알아보기 : [방송통신위원회 > 알림마당 > 보도자료\(Click\)](#)

시청자미디어재단, 새로운 미래 비전과 대국민 7대 약속 발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글로벌 미디어교육 기관으로의 성장을 선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교육의 중심,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전문기관'이라는 미래 비전과 '7대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교육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7대 혁신 과제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양질의 미디어 교육 확대
- AI 등 기술발전에 따른 올바르고 안전한 미디어 역량 지원
- 전국 미디어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취약계층 미디어 지원 및 권익보호
- 해외 미디어교육 확대
- 미디어교육 체계적 정책 기반 구축
-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재단은 이미 4월 말부터 3주간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AI, 딥페이크, VR/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체험과 특강을 개설하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오는 6월 23일에는 미디어 교육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국내외 미디어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미디어 교육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며 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다.

🌐 더 알아보기 : 시청자미디어재단 > 알림마당 > 보도자료([Click](#))

방송통신위원회, 2025년도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TV보급사업 신청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시각·청각 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맞춤형 티브이(TV) 3만 5천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4월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맞춤형 티브이(TV)는 ●메뉴 음성 지원 ●자막·수어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비율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천대 확대된 3만 5천대를 보급하며, 화면도 43인치로 더 커진 고선명 스마트 티브이(Full HDTV)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은 무료로 보급되며, 그 외 시각·청각 장애인은 일부 비용(5만원)을 부담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신청 접수는 마감되었으며, 그 외 대상자는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가능하다.

🔗 더 알아보기 : 방송통신위원회 > 알림마당 > 보도자료([Click](#))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통합 플랫폼 참여누리 탄생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민 제작자가 방송국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쉽고 빠르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통합 플랫폼 '참여누리'를 5월부터 운영한다.

시민 제작자는 참여누리에 회원 가입 후 참여프로그램 제작 신청 후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면 방송사별로 방영 채택되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참여누리 홈페이지: <https://pa.kcmf.or.kr> / (02) 6900-8342

🔗 더 알아보기 : 시청자미디어재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Click](#))

권익보호

전기통신 사업자 47곳 이용자 보호 평가 대상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과 의견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를 막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평가 대상 및 신규 포함 사업자

2025년도 평가 대상은 이용자 규모, 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47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 기간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21개사
- 부가통신사업자: SNS, 앱마켓, OTT, 인터넷 쇼핑 등 26개사

올해는 테무,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티빙, 치지직, 유니컴스 등 6개사가 새롭게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시범 평가를 받은 뒤 본 평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3년 시범 평가 대상이었던 인스타그램은 2년의 시범 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에 신규로 포함된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까지 시범 평가를 받고 내년부터 본 평가를 받는다.

2025년도 평가는 다음 항목들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 관련 법규 준수 실적
- 피해예방 활동 실적
-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❶ 더 알아보기 : 방송통신위원회 > 알림마당 > 보도자료([Click](#))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수용성 등을 폭넓게 조사한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개발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 17개 시도 만 15~69세 이하 4,4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현황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4.0%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년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료 구독 경험은 7.0%로 전년도 대비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이용 경험 및 유료 구독 경험 변화

항목 (단위: %)	2023년	2024년
생성형 AI 이용 경험	12.3	24.0
생성형 AI 유료 구독 경험	0.9	7.0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용 동기는 '정보 검색에 효율적'(87.9%), '일상 업무를 지원하는 데 도움'(70.0%), '대화 나눌 상대가 필요해 사용'(6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동기에 대한 수치가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생성형 AI 활용 분야

활용 분야	비율 (%)
텍스트 생성	57.2
음성·음악 생성	21.4
이미지 생성	11.8
기타	9.6 (100 - 57.2 - 21.4 - 11.8)

 더 알아보기 : 방송통신위원회 > 알림마당 > 보도자료([Click](#))

방통위, SKT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4월 19일 발생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 불편 및 불안 해소를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감시 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팸 문자 피해 방지 및 대응 강화

최근 'USIM 교체', 'USIM 도착', 'USIM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을 사칭한 피싱 및 스미싱 피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통위는 불법 스팸 신고량 추이 및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또한, 불법 스팸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했으며, 필요 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로 구성된 '불법 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대상 피해 예방 교육 및 상담 서비스 확대

방통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 교육 과정에 이번 침해사고와 관련된 USIM 교체 및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 스팸 대응 요령 등을 포함하여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디지털 플랫폼 및 AI 활용법, 금융 사기 예방 방법 등을 포함하여 2025년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더불어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 계층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본인확인 시스템 특별 점검 및 시장 단속 강화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 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 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정기 점검(7월 실시 예정)과는 별개로, 해킹과 관련하여 본인확인 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심도 있게 살폈다. 아울러 유통점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서비스 피해 상담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 / ☎142-235)

 더 알아보기 : [방송통신위원회](#) > [알림 마당](#) > [보도자료\(Click\)](#)

재난 지역(오폭·산불) 피해 주민 대상 TV 수신료 면제 조치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5월 21일 개최된 '2025년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의 전투기 오폭 사고와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경남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면제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경기 포천시 이동면
- 울산시 울주군
- 경북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 경남 산청군, 하동군

수신료 면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받은 텔레비전 수상기에 한해 6개월간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 피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2000년 이후 총 20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 조치를 시행해왔다.

🔗 더 알아보기 : 방송통신위원회 > 알림마당 > 보도자료([Click](#))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 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1.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및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AI 이용자보호법' 제정
- 불법·유해정보 차단 강화(마약·도박·디프 페이크 성범죄물 등) 및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대책 마련
- 방송의 공익성 심사 강화 및 재난방송 관리 지원 확대

2.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및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 차세대 방송 혁신전략 수립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계획 추진
- 방송콘텐츠 해외 유통 지원(캐나다와 공동제작 협정 체결 등)

3.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조치 추진 및 불공정 행위 방지책 마련
- 민생 밀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점검 및 다크패턴·강제 광고 근절
- 장애인 대상 맞춤형TV 지원 확대 및 미디어 교육 서비스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삼고,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며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더 알아보기 : 방송통신위원회 > 알림마당 > 보도자료([Click](#))

03

해외동향

권익보호

- 딥페이크 규제 - 주요 국가별 정책 및 법제 현황

딥페이크 규제 - 주요 국가별 정책 및 법제 현황

딥페이크 기술은 고(故)인의 목소리 복원 및 홀로그램 재현, 영화 제작 시간 단축, 의료 영상 분석을 통한 질병 탐지 등 긍정적인 활용 사례가 많다. 그러나 특정인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처럼 기술 악용 사례도 심각하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지원 요청 781건 중 36.9%인 288명이 10대 이하 청소년으로, 딥페이크 기술이 청소년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25년 '전 국민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개념 및 피해 유형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처럼 보이지만 조작되거나 합성된 오디오 또는 시각 미디어를 의미한다. 딥페이크는 개인과 조직,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리적 피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며,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는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성적 착취, 협박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빌리 아일리시, 2024년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어 큰 문제가 되었다.

재정적 피해

금전 갈취, 신원 도용을 통한 기밀정보 탈취, 사기 행위, 기업 평판 훼손 등을 초래할 수 있다. 2024년 홍콩에서 발생한 다국적 기업 직원의 350억 원 송금 사건은 딥페이크 영상이 활용된 가짜 화상회의로 인한 피해 사례이다.

사회적 피해

조작된 뉴스 및 미디어 콘텐츠 유포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며, 금융 시장 불안정,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증거 조작,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정보 확산 등을 통해 민주주의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AI로 조작된 가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음성을 모방한 딥페이크 전화가 발신된 사례가 있다.

딥페이크 관련 해외 주요 법제

미국

미국은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딥페이크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연방 차원에서는 '딥페이크 책임법(Deepfakes Accountability Act)'은 AI로 생성된 콘텐츠임을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No AI FRAUD Act'는 AI를 활용한 유명인 사칭 마케팅 및 저작권 침해를 규제한다. 'DEFIANCE Act'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연방 차원에서 범죄화하고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한다.

주 별로는 텍사스주는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 사용을 금지하며, 뉴멕시코주는 AI 생성 여부 명시 의무를 규정했다. 미시시피주는 선거 90일 이내 상대 동의 없는 딥페이크 유포를 금지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선거 관련 딥페이크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며, 플로리다주는 동의 없는 성적 딥페이크 유포 시 중범죄로 처벌한다. 조지아주와 텍사스주는 반복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버지니아주는 협박 목적으로 성적 이미지를 유포할 경우 딥페이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한다. 사우스다코다주는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음란물 생성 및 유통을 금지한다.

유럽연합(EU)

EU는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규제한다.

2024년 5월 제정된 인공지능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며, 딥페이크 기술은 '제한된 위험' 범주에 해당한다. AI 시스템 공급자는 합성 콘텐츠 생성 시 AI로 생성되었음을 표시해야 하며, 사용자는 딥페이크 콘텐츠 유통 시 인위적으로 제작되었음을 공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3%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2023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 사업자는 딥페이크 이미지·오디오·비디오 업로드 시 명확하게 표시할 의무가 있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기만적 정보'에 대한 구조적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법 위반 시 해당 사업자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국

영국은 딥페이크 기술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련 딥페이크 규제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4년에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을 개정하여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정보를 세분화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피해자 동의 없는 은밀한 신체 정보 유포, 놀람이나 괴로움, 모욕을 주기 위한 유포, 성적 만족 목적의 유포, 두려움을 유발할 의도로 유포 협박 등이 범죄로 규정된다.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에는 2024년 1월 31일부터 사이버 플래싱과 사적인 이미지·영상 공유 행위가 신중 범죄로 명시되었으며, 딥페이크 기술로 생성된 이미지와 영상도 포함된다.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정보 신고 시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오프컴(Ofcom)은 플랫폼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 제한, 임시 제한,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호주

호주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이 선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선거 관련 딥페이크 규제 입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대신 형법(Criminal Code) 개정을 통해 2024년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피해자 동의 없는 성적 영상물 유포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딥페이크 등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 또는 조작된 영상물도 포함된다. 2024년 9월 개정안 시행으로 동의 없는 딥페이크 생성물 공유

시 최대 6년, 단순 생성만으로도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정보는 '온라인 폭력'이나 '혐오적 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에 의해 삭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삭제하지 않거나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부과된다. 온라인안전국은 딥페이크 대응을 위해 정보 제공, 고충 신고 시스템 운영, 교육 콘텐츠 개발, 안전 설계 원칙 지원, 기업 자율 정책 마련 독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

중국은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안보와 이익, 국가 이미지, 공익, 경제·사회 질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허위 기사 생성 및 유포 시 재출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은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용자에게 대해 실명 확인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불법·유해 정보가 발견되면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된다. 이용자가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 시 해당 인물에게 사전 고지 및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사용자와 제3자가 딥페이크 콘텐츠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식별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신고 및 이의 제기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의무화되었으며,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

국내 딥페이크 정책 현황

대한민국은 딥페이크를 포함한 생성형 AI 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2024년 5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을 핵심 과제로 포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3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를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023년 12월 '저작권 강국 실현을 위한 4대 전략'을 발표하고 'AI-저작권 안내서'를 제작·배포했으며 경찰청은 2024년 3월 딥페이크 영상 진위 판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포괄적인 AI 규제법은 부재하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 등 기존 법률을 통해 딥페이크 악용 행위가 일정 부분 규율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개정되어 대상자 동의 없는 신체 등을 성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판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은 2023년 12월 개정되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상의 생성·편집·유포·상영·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 기간 외에는 AI 생성 영상에 '가상의 정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22대 국회(2024~2028년)에서 '인공지능'을 명시한 법안 4건이 발의되었으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사전

고지 및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 유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법도 제안되고 있다.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향후 방향

딥페이크 기술 확산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시급하다. 단순한 'AI 생성물' 표기 의무를 넘어, 고도화된 탐지 기술 개발, 이용자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형사 처분 강화 및 피해자 구제 체계 확립, 플랫폼 책임의 법적 명문화 등 다층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기술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건전한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중요하며, 딥페이크 콘텐츠의 유형별 특성과 위해성에 기반을 둔 정교한 입법과 정책적 실행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권익정보센터에서 발간하는
「시청자 권익보호 동향 리포트」입니다.
시청자 권익정보 플랫폼 '미디어인(Medi人)'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ediin.or.kr>